

“선택 아닌 필수인데”...광주 반려동물 등록 34% 불과



광주지역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률이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잃거나 버려진 동물의 주인을 쉽게 찾는 등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선 반려동물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반려

해마다 3000여 마리 유기...주인 찾는 경우 단 16%

“외장형 쉽게 손상 확률 높아...내장형으로 삽입해야”

동물 16만 6000마리(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중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5만7900마리, 비율로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로 주인을 쉽게 찾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두 달 반 동안 반려동물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다. 이 기간에 등록을 마친 광주지역 반려동물은 3366마리에 달했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실제 지난 7월 오후 광주시·구청·동물보호소 관계자 등 10여 명이 광주 서구 치평동 5·18 잔디공원 기념광장에서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에 나선 결과,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거나 내장형 칩 대신 인식표만 부착한 사례가 나왔다.

개와 고양이를 한해 동안 광주에서 유기된 채 발견된 반려동물은 3000마리를 웃돌고 있지만 등록된 경우는 10마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때 주인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광주시 동물보호소 통계에 따르면 연도

별 유기동물은 ▲2017년 3689마리 ▲2018년 3252마리 ▲2019년 3700마리 ▲2020년 3613마리에 달했고, 올 들어서도 9월 말까지 2487마리를 기록했다. 5년 간 연평균 3330마리다.

반면 주인을 찾은 유기동물은 연평균 530마리로 15.9%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29.8%(991마리)만 입양됐고, 나머지는 45%(1500마리)는 자연사, 9.1%(303마리)는 안락사로 처리됐다.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대부분 유기동물 등록률이 5%대에 그쳐 주인을 찾기 힘든 상태며, 대부분은 보호소에서 죽는다고 설명했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임용관 대표는 “유기동물 발견 시 동물등록이 돼 있으면 주인과

주소지 정보를 찾기 쉽기 때문에 유기를 방지하거나 주인을 찾을 확률이 높지만 구조된 유기동물 중 내장형 칩이 등록된 경우는 5% 미만인데 그쳐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스트레사 전염병 등으로 생을 마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등록 시 외장형 칩 목걸이보다 인식표는 외부환경에 의해 쉽게 손상될 확률이 높다”며 “몸 속에 직접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인이 바뀔 경우 동물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은 시·구청 또는 동물명원에서 할 수 있다. 외장형은 3만 원, 내장형은 4만 원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인식표 미부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이슬기자

“보이스피싱 자수하세요”

경찰, 오늘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시행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가 자수할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는 특별자수기간을 경찰이 3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해 1월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주요 증거를 확보,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콜센터’나 ‘장집’ 사무실과 같은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활동한 자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등을 제공한 통신사업자나 개인정보를 공급한 해외 범죄단체에 가담한 자 등이다.

자수는 본인에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또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 피의자에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도

이번 자수 범위에 포함한다. 경찰은 자수기간 중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 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이라고 명시하는 등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분류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단순 가담자는 자수 경우,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정보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가을 내려앉은 들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지난 7월 전남 강진군 작천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광주 7.6%·전남 11.1%’ 아직도 분필가루 칠판 쓴다

“호흡기 질환 등 학생건강 위협...시급히 교체해야”

광주·전남 지역 일부 학교가 아직도 가루가 날리는 분필용 칠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실 내 분필용 칠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각급 학교 칠판 개수는 총 1만2158개이며 이중 분필가루 칠판은 919개(7.6%)였다.

전남은 1만7777개의 칠판 중 1975개(11.1%)가 분필가루 칠판이었다. 전북 지역의 분필가루 칠판 비율은 3.5%, 제주는 2.7%에 불과했다.

세종시의 경우 분필가루 칠판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모든 교실에 화이트보드 칠판과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석고가 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포함,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 분필가루 칠판을 포함한 노후화된 칠판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워킹레일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